

人権・社会正義と社会福祉－韓国と日本の経験と展望

Kensaku Ohashi 大橋謙策(日本社会事業大, 日本社会福祉学会 前会長)

1. 日本における人権意識の弱さと人権感覚体得の難しさ－日本の社会構造と文化

日本の社会においては第2次世界大戦後、人権、社会正義が法律で確立し、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でも強調してきたところであるが、実際には人権意識も弱いし、人権感覚を養うことも非常に難しいところがある。日本は地形的に島国であり、江戸時代(1600年代始めから1860年代まで)には鎖国制度で外国との交流を禁じた歴史がある。また、稲作農耕文化が作りだす地域社会の強い共同性もある。したがって、李御領先生が『縮み志向の日本人』という本で指摘したように、日本人の思考方法は視点や取り組み方が内へ内へと向かい、外へ積極的に出て交流するという感覚に欠ける。日本人の中には、「単一民族、単一国家、単一文化、単一宗教」といった国家観を有している人が多い(日本の総理大臣になった人もこう発言していた)。したがって、仲間内を尊重し、周りと違うことを嫌う生活文化を有しているので、周りの人は皆自分と同じという錯覚に囚われ、一人一人を丁寧に観察し、一人一人の違いを意識的にとらえ、その違いを尊重するという感覚を欠けている。

また、稲作農耕文化がもたらす社会構造の力が強力であったために、その社会の枠組みから逸脱することや壊すことに非常に抵抗感がある。したがって、社会の矛盾を指摘し、是正しようとする活動や営み、あるいは法律上認められている権利を行使することに對する抵抗感もある。そのような活動や言動をする人を排斥し、白眼視する風潮が今でも色濃く残っている。

そのような文化を有してきた日本人に民族の違い、個々人の生活様式、宗教、考え方の違いや社会正義を教えることはとても難しい。どうしても、観念的、抽象的言葉として教え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言葉としての人権や社会正義を知っているものの、その人の行動や生活様式までも変えることは難しい。未だ多くの人権問題、社会正義の問題が残存している。

2. 市町村における住民参加による地域福祉計画づくりと人権、社会正義

このような日本の文化の中で、社会福祉を推進していくために、地域住民の社会福祉への関心と理解を深め、地域の社会福祉問題解決の活動に参加する力量を住民自身が体得できるように『福祉教育』を推進してきた。その福祉教育は子ども・青年への福祉教育と地域の大人への福祉教育とがあり、4つの地域福祉の主体形成を考えてきた。それは、①市町村における地域福祉計画を策定する力、②社会福祉制度を理解し、福祉サービスを適切に利用できる力、③地域の社会福祉問題を解決するボランティアの力、④医療、年金、介護保険のあり方を考えられる社会保険契約能力である。地域福祉計画づくりは住民の福祉教育を最も推進できる場面である。地域住民が小地域毎に住民懇談会を開催し、地域の生活問題を発見し、その解決方策を話し合い、計画づくりをしていくなかで、地域で人権が浸されている実態や社会正義が罷り通っていない問題を知り、それを取り上げること自体が地域住民の学習の機会となり、意識を変容させていく。社会福祉の専門家が知らない人権や社会正義が脅かされている実態が住民から出されることになり、ソーシャルワーカーにとってもその住民座談会はニーズキャッチの場になる。人口10万人の市で住民座談会を133か所で開催し、参加した住民は2100人で、出された生活課題は5000項目にもなった。このような市町村の地域福祉計画づくりでは、①計画づくりにおける過程(プロセス)が大切で多くの住民の参加を得ることになり、②社会福祉に対する意識が変容し、社会福祉に対する力學(リレーションシップ)が変わり、市町村の社会福祉を推進する力を増大させ、③結果として、社会福祉サービス、社会福祉制度の目標(タスク)が達成されることになり、人権、社会正義が社会福祉的に確保されていくことになる。

인권·사회정의와 사회복지 - 한국과 일본의 경험과 전망

오하시 켄사쿠(일본사회사업대학)

1. 일본에 있어서의 인권의식의 약함과 인권감각체득의 어려움 - 일본의 사회구조와 문화

일본사회는 제2차세계대전후 인권, 사회정의가 법률로 확립되었으며 소셜워크교육에서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인권의식도 약하고, 인권감각을 기르는 일도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본은 지형적으로 섬나라로서 에도시대(1600년대초부터 1860년대까지)때는 쇄국정책으로 인해 외국과의 교류를 금지하였다. 또한 벼농사 농경문화가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강한 공동체 의식도 있다. 따라서 이어령씨가 「축소지향형의 일본인」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인의 사고방식은 안으로 안으로 향해있어,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교류하는 감각이 부족하다. 일본인 중에는 「단일민족, 단일국가, 단일문화, 단일종교」라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수상도 이렇게 발언하였다) 따라서, 동료들을 존중하고, 주위사람과 다른 것을 싫어하는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주위사람들도 모두 자기와 똑같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한사람 한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차이를 의식하여 그 차이를 존중하는 감각이 부족하다. 또한, 벼농사 농경문화가 가져온 사회구조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 사회의 틀을 벗어나거나 부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감이 있다. 따라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활동이나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도 저항감이 있다. 그러한 활동이나 언동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백안시하는 풍조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게 민족의 차이, 개개인의 생활양식, 종교, 사고의 차이나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무래도, 관념적, 추상적 말로서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말로서의 인권이나 사회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활양식까지 바꾸는 것은 어렵다. 아직도 많은 인권문제,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2. 시군구에 있어서의 주민참가에 의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인권, 사회정의

이와같은 일본의 문화 속에서 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역량을 주민 자신이 체득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 복지교육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교육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이 있으며 4개의 「지역복지의 주체 형성」을 제시해 왔다. 그것은 ①시군구에 있어서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힘 ②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고 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힘 ③지역의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의 힘 ④의료, 연금, 수발보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보험계약능력이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은 주민의 복지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다. 지역주민이 소지역마다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생활문제를 찾아내어,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속에서, 지역의 인권침해의 실태나 사회정의를 억압되는 문제를 발견하여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의 학습의 기회가 되며 의식을 바꾸어간다. 사회복지전문가가 모르고 있는 인권이나 사회정의를 위협되고 있는 실태가 주민들로부터 나옴으로서 소셜워커에게 있어서도 그 주민좌담회는 니즈를 발견하는 장이 된다. 인구 10만명의 시에서 주민좌담회를 133회나 개최하였는데, 2100명의 주민이 참가하여 5000항목의 생활과제가 나왔다. 이러한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수립에서는 ①계획수립에 있어서의 과정이 중요하며 많은 주민이 참가함으로써 ②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사회복지에 대한 역학이 바뀌어, 시군구의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힘을 증대시켜 ③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목표를 달성되게 되어 인권, 사회정의를 사회적으로 확보되어 가게 된다.